



제410회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홍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001호)

2023.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 제안 및 회부	1
II .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 및 회부

가.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28인

나. 제안일자 : 2023년 8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5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1945년 8월 24일,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던 조선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가 승선했던 우키시마호가 폭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수천 명의 조선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사건 후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 폭발 및 침몰 원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키시마호에 승선했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은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폭침 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키시마호 희생자 집단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다수의 목격자 증언과 기록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해가 더 훼손되기 전에 정밀 발굴 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유해가 고국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참담한 아픔을 겪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진상조사 및 유해 송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참혹한 사건으로 겪은 고통과 피해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생존자 유가족에 대해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와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은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던 조선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이 사망한 역사적 비극이었음.

사건이 발생한 지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키시마호 폭발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으며, 진상규명을 포함해 정확한 피해인원 조차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우키시마호에 승선했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지내왔으며,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일본 정부와 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살아가고 있음.

우키시마호 폭침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항의 조치를 통해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의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임.

이에 국회가 앞장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에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을 통해 우키시마호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와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 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을 태운 우키시마호의 폭침 사건과 관련하여 ① 동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생존자, 유가족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 ② 한일 양국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 ③ 희생자의 유해를 찾아내 고국과 유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④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1945년 8월 22일 일본 동북지방 아오모리(靑森)현 오미나토(大湊)에서 강제징용 한국인 노무자들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귀환하기 위해 출발한 우키시마호(浮島丸, 4730톤)가 8월 24일 17시경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 항 앞바다 300m 지점에서 갑작스런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음.

일본측은 1950년 3월 선체 인양 후 103위 유골을 수습, 당시 마이즈루 해병단이 가매장했던 153위 유골을 합쳐 총 256위를 화장 후 기존 일본 정부 조사결과인 한국인 사망자 수 524명에 맞추어 유족 동의 없이 도쿄 유텐지에 분골을 합장하고, 이후 3차례¹⁾에 걸쳐 유골 일부를 봉환하였음.²⁾

1) 1971년, 1974년, 1976년

2) 2008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조사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키시마호 폭발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진상규명을 포함해 정확한 피해인원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임.

2005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승선자 수, 사망자 수, 침몰 원인 등 생존자 및 전문가, 일본측 의견이 서로 다르고,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한 바 있음.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관련 의혹>

쟁점	유족 입장	일측 입장
승선경위	승선 강요	귀국 희망
침몰원인	일본해군 고의 폭파	연합군 부설 기뢰와 충돌 폭침
사망자	승선규모 6천~8천명 중 3,000명 이상 사망	조선인 3,735명 중 524명(14.0%) 일본해군 승무원 255명 중 25명 사망(9.8%)

자료: 행정안전부

우키시마호 폭침 희생자 유족들은 1992년 일본 법원에 국가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1년 교토지방법재판소에서 일본 정부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인에게 1인당 300만엔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요청은 기각하였으며, 그나마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을 번복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

동 결의안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에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을 통해 우키시마호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와 피해 회복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부는 향후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족 조사 실시 및 유텐지 유해봉환에 대한 유족 의사를 확인 예정이며,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추진³⁾하여 향후 유해발굴 시, 유족 유전자와 대조하여 유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함.

문 의 처
02) 6788-5266

3) 2023.9.4.~10.11. 신청·접수